



시 보



제1491호 2021. 4. 5(월)

고 시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3

공 고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
-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8
-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1
-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8
- 「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0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6
-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7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공보과 ☎ 061-270-8539

목포시 고시 제 2021-51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5일

목 포 시 장

○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순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1	청호로 22	2021.4.2.	건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62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목포시 고시 제 2021-52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5일

목 포 시 장

○ 도로명주소 :

종전의 주소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불	임	참	조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628)에 문의 또는 목포시청 홈페이지(www.mokpo.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4. 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지번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붙임 >

종전의 주소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옥암동 1259-3	남악1로52번가길 29	직권	2010.06.21.	남악1로 기초번호 활용.
대양동 20-2 외 2필지	산계길 92	직권	2009.11.23.	산계마을을 지나는 도로임.
옥암동 1050-8	복산길 40	직권	2009.11.23.	옛지명을 사용.
대양동 1191-3	대양산단로125번길 23	직권	2015.08.10.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로명 부여.
달동 815-4	고하도길 20	직권	2009.11.23	지명사용.
용해동 47-31	백년대로200번길 21	직권	2009.11.23.	현 도로명칭 사용 개항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설된 도로임.
대양동 1198-8	대양산단로125번길 48	직권	2015.08.10.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로명 부여.
대양동 1198-8	대양산단로125번길 46	직권	2015.08.10.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로명 부여.
대양동 1198-8	대양산단로125번길 50	직권	2015.08.10.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로명 부여.
옥암동 1219-8	후광대로143번안길 41	직권	2007.11.08.	김대중 전대통령 호를 따서 도로명 제정.
옥암동 982-6	삼향천로 80	직권	2009.11.23.	삼향천 부근에 위치한 도로임.
용해동 212-29	송림로41번길 4-1	직권	2009.11.23.	인근에 목포대학교 송림 캠퍼스가 있음.

목포시 공고 제2021-579호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목 포 시 장

1. 조 례 명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법제처 법령 위임 필수 조례 및 국토교통부 시달 지침 반영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권고사항 반영 등

3.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1건)

-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재공고 및 열람 범위 확대(안 제8조)

☐ 법제처 법령 위임 필수 조례 및 국토교통부 시달 지침 반영(3건)

-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 기준 강화 (안 제17조의4)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안 제50조의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안 제53조의2)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권고사항 반영(1건)

-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문구 명확화(안 제3조)

☐ 조례 문구 오기사항 정정(1건)

- 공동위원회 명칭 오기사항 정정(안 제66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6.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7.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의견 없음
 - 상위법령 위임사항 반영 : 안 제8조, 안 제17조의4, 제50조의2, 제53조의2

8. 예산 상황 : 별도 예산조치 불필요**9. 입법예고 기간 : 2021. 4. 5. ~ 26.(21일간)****10.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11.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12.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4. 26.까지 목포시장(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9), 직접방문 등

※ 보내실 곳 : 우)58613, 목포시 양일로 203(용당동) 목포시청(도시계획과)

1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도시계획과(전화 : 061-270-8414, FAX : 061-270-35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 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다른 도시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영 제22조 제5항”을 “법 제28조제4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장관과의 협의와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제17조의4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옥상 난간(벽) 및 지붕 경계 내측에서 50cm이상 후퇴하여 설치할 것.

나. 옥상 바닥 및 지붕면에서 5m 이내로 설치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에 제외한다.

다. 건축물에 대한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 검토를 위한 관련 자격이 있는 기술사(건축사, 구조전문가 등)가 작성한 검토서를 제출할 것.

라.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m 이상인 경우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

제50조의2 및 제5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다음 용도지역에 있는

시장의 건폐율은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영향이 없다고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3.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제53조의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제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다음 용도지역에 있는 시장의 용적률은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영향이 없다고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제66조 중 “**공동위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시장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정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수립·시행하는 다른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되도록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다른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 법 제28조제4항 각 호-----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3.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장관과의 협의와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4(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8.12.17.>	제17조의4(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공작물 설치 수평투영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② ~ ④ (생략)

<신설>

7.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옥상 난간(벽) 및 지붕 경계 내측에서 50cm이상 후퇴하여 설치할 것.

나. 옥상 바닥 및 지붕면에서 5m 이내로 설치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건축물에 대한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 검토를 위한 관련 자격이 있는 기술사(건축사, 구조전문가 등)가 작성한 검토서를 제출할 것.

라.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m 이상인 경우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신 설>

제66조(설치) 시장은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자문하는 공동위위원회를 둔다.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다음 용도지역에 있는 시장의 건폐율은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영향이 없다고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3.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제53조의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제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다음 용도지역에 있는 시장의 용적률은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영향이 없다고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제66조(설치) -----

공동위원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입 법 예 고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20.10.20.)에 따라 우리시 조례 조항을 일부개정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체휴무 제도 확대 (안 제15조제2항)
- 연가 저축제 개선 (안 제18조의2)
- 공무 관련 소환 시 공가 사용 가능 기관에 경찰 명시 (안 제22조)
- 가족돌봄휴가 도입 및 자녀돌봄 사유 확대 (안 제23조제14항)
- 재해구호휴가 확대 (안 제23조제20항)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신 · 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7.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8. 규제심사(심의) 대상여부 검토 : 해당없음

9. 입법예고

- 기 간 : 2021. 4. 5.(월) ~ 2021. 4. 26.(월)(21일간)

10.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11.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은”을 “목포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시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제18조의3으로 하고,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제19조제5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활용하지 아니할”을 “사용하지 않은”으로, “지급하고 연가에”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없다”를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

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한다”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를 “연가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24조의1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뺀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로, “공제하지 않는다”를 “빼지 않되, 본문에 따라 이미 빼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 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하여야”를 “허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검찰”을 “검찰, 경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참석할 때”를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로 한다.

제23조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23조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을 “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항 및 제2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⑳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 기준

(제24조2 관련)

1.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공휴일 또는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이하 "토요일등"이라 한다)에 근무를 한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나.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한 시간이나 토요일등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휴가일수 계산 등

- 가. 휴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한다.
- 다. 휴가기간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3. 연가

-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경된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text{제7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뺀다.
- 다. 제4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권장 연가 시간은 지방자치단체의 권장 연가 일수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frac{\text{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권장연가일수}}{\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4. 병가

가. 병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frac{\text{제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나. 가목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이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3호다목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5.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나.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목포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공무원 ----- ----- --.
제2조(복무선서) ① <u>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u> ② · ③ (생략)	제2조(복무선서) ① <u>목포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u> ----- ----- -----.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시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시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2 (생 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생 략)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

제18조의2(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제18조의3 (현행 제18조의2와 같음)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해당 -----

---- 사용하지 않은 -----

----- 지급하는 것

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생략)

제19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① (생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제7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2. (생략)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으로 연가를 -----.

-----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

1. 2. (현행과 같음)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 연가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24조의1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뺀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빼지 않되, 본문에 따라 이미 빼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 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

② ~ ⑦ (생 략)

제22조(공가)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3. · 4. (생 략)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
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
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6. ~ 9. (생 략)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
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
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11.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가) -----

---- 허가해야 -----.

1. (현행과 같음)

2. ----- 검찰,
경찰, -----

3. · 4. (현행과 같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

6. ~ 9. (현행과 같음)

10. -----

----- 참석하거
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
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
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
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
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
정한다)에 참석할 때

11.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휴가) ① ~ ⑥ (생 략)

⑦ ~ ⑨ 삭 제

⑩ 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

제23조(특별휴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⑫ · ⑬ (생 략)

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신 설>

90일까지

⑫ · ⑬ (현행과 같음)

⑭ 공무원-----

-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

-----.

1. -----

-----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

<신 설>

<신 설>

⑮ ~ ⑱ (생 략)

<신 설>

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⑯ ~ ⑲ (현행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와 같음)

⑳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으로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설치한 무단투기 이동용 CCTV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목포시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5일

목 포 시 장

1. 사 업 명 : 목포시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CCTV 설치
 2. 시 행 청 : 전라남도 목포시
 3. 공 고 기 간 : 2021. 4. 5. ~ 2021. 4. 24.(20일간)
 4. 의 견 제 출 : 2021. 4. 5. ~ 2021. 4. 24.(20일간)
 5. 공 고 방 법 :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6. 근 거 법 규
 -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설 치 장 소 : 목포시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 40군데
- ※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 현황에 따라 필요시 목포시 관내 타 지역으로 이설

8. 설 치 목 적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한함

9. 촬영시간 및 방식 : 설치장소 24시간 연속촬영 및 사람이 접근시 센서가 인식하여 무단투기 금지 경고 음성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음

10. 운영관리 및 연락처 : 목포시청 자원순환과 ☎ 061-270-8502

11.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목포시 자원순환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 출 처 : 목포시 자원순환과

라. 제출방법

○ 우편 :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 목포시청 자원순환과(우편번호 58724)

○ 팩스 : 061-270-3583

마. 제출양식 : 의견 제출서【붙임】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사.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 불임 1 】

의견제출서

사 업 명	목포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2021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div>				
목 포 시 장 귀하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5.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공해상에서의 수난사고 시 구호활동에 동원된 민간 수난구호 종사자의 비용 지급 혼선을 막기 위해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의 비용 지급 주체, 범위, 지급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15116 (2020. 11. 4.)호 관련】

2. 주요내용

- 관할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한정 → 관외 수상에서 사고 발생 시에는 선적지 관할청에서 지원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1조, 제5조)
- “수난구호 참여자” 정의 불명확(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 → ‘민간인 또는 구조단체,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명확히 규정(안 제2조)
- 수난구호 참여자의 책무 조항 없음 →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 가입 등의 규정 준수 조항 추가(안 제3조)
-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에 발생한 사고에 한정 →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으로 제2조 제3호와 동일하게 지원범위 확대(안 제5조)
- 지급기준 불명확(유류대 및 인건비 등) → ‘유류대와 인건비,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 등’으로 명확히 규정(안 제6조)
- 기타 오탈자 수정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관계 법령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1항, 제39조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7. 예산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입법예고 : 2021. 4. 5. ~ 4. 26. (21일 이상)

9. 사전협의사항 : 해당없음

10.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4월 26일까지 목포시장(수산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수산진흥과
-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659),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수산진흥과(☎ 061-270-3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목포시 관내 수상” 을 “수상”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6호” 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 을 “각 목”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난구호참여자” 란” 을 ““수난구호 참여자” 란” 으로, “요청에 의하여” 를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로, “선박 등 장비” 를 “구조단체,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과한” 을 “관한” 으로 한다.

제3조 중 “라 한다” 를 “이라 한다” 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중 “제2조 제4호” 를 “제2조제4호” 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 4조” 를 “제4조” 로, “조난사고 등” 을 “조난사고” 로, “민간인·민간단체 및 목포시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 를 “자와 목포시에서 위탁한 민간단체의 조난사고 예방활동 및 교육훈련,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 물품 구입 등”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 을 “선박 등”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목포시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목포시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 (단, 타 지자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에 한한다)

제6조제1항 중 “유류대 및 인건비” 를 “유류대와 인건비,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목포시 관내 수상</u> 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수상</u> -----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수상”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1.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 ----- -----.
2.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나. (생략)	2. ----- <u>각 목</u>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수난구호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u>선박 등 장비</u> 를 말한다.	4. “수난구호 참여자”란 ----- ----- -- <u>요청 또는 자발적으로</u> ----- ----- <u>구조단체,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u> -----.

5. ~ 6. (생략)

7.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과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 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신설>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제2조 제4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수난구호 참여자와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 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 등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민간단체 및 목포시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5. ~ 6. (현행과 같음)

7. -----
관한 -----
-----.

제3조(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 제2조제4호 -

-----.

제5조(지원대상) 제4조-----

-- 조난사고-----

--- 자와 목포시에서 위탁한 민간단체의 조난사고 예방활동 및 교육훈련,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 물품 구입 등----.

1. 목포시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신 설>

2. (생 략)

3. 목포시에서 위탁한 민간단체의
조난사고 예방활동 및 교육훈련,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물품
구입 등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
대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지급한다.

②·③ (생 략)

1. ----- 선박 등

2. 목포시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목포시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
의 조난사고(단, 타 지자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에 한한다)

3. (현행 제2호와 같음)

<삭 제>

제6조(지급기준) ① ----- 유류대
와 인건비,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 -----
-----.

②·③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입 법 예 고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정비를 통하여 목포시 체육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위원의 해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2조)

3.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4.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5.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입법예고 기간 : 2021. 4. 5. ~ 2021. 4. 26.(21일간)

7. 의견제출

- 이 규칙의 입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교육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우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 3층 교육체육과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mokpo.go.kr>)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교육체육과(☎061-270-3402, FAX 270-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2장(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목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제3조(설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목포시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체육진흥계획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용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목포시 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체육 업무 국장이 되고 위촉직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시 관할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학교 체육진흥 관계자
4. 그 밖에 체육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임시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회의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앞에 “제3장 체육진흥지원”을 삽입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26조 및 제27조로 하고, 제3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제10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제4장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제11조를 제24조로 한다.

제11조의2를 제25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3조) 중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20조 앞에 “제4장 목포시체육회 등 지원”을 삽입한다.

제20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제4조(체육진흥사업의 시행), 제5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제6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제8조(우수선수 및 단체육성 지원), 제9조(학교체육의 지원)”를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를 “제17조”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3항”을 “제20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4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25조(종전의 제11조의2)제1항 중 “제11조”를 “제2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제1장 총칙</u></p> <p><u>제2장 목포시 체육진흥협의회</u></p> <p><u>제3조(설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목포시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u></p> <p><u>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체육진흥계획 수립</u> <u>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용</u> <u>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p><u>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목포시 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u>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국장이 되고 위촉직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u></p>

<신 설>

<신 설>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시 관할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학교 체육진흥 관계자

4. 그 밖에 체육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임시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회의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목포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
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 제9조 (생 략)

<신 설>

제10조(사업위탁) ① 시장은 제4조
(체육진흥사업의 시행), 제5조(전
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제6조 (생활체육의 진흥 및 보조
금 지원), 제8조(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제9조(학교체육의 지
원)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목포시체육회 및 비영리 법
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장애인체육의 진
흥 및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포시장애
인체육회 및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3장 체육진흥지원

제1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시장

-----.

제14조 ~ 제19조 (현행 제4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제4장 목포시체육회 등 지원

제20조(사업위탁) ① ----- 제14조
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19조-

-----.

② ----- 제17조-----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시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목포시체육회 및 목포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목포시체육회 및 목포시장애인체육회는 위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제10조의4 (생략)

<신설>

제11조 (생략)

제11조의2(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체육회등의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제13조 (생략)

제21조(시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 제20조제3항-----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1항 -----

-----.

제22조·제23조 (현행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와 같음)

제5장 보칙

제24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
- 제24조-----

-----.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제27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입 법 예 고

『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5.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 중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대한 기준을 신설

2. 주요 내용

-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대상 명문화(안 제4조 별표4)
 -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의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에 따른 수당 추가지급액 : 월 300천원

3. 개정 조례안 : 별도 첨부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5.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6(직급보조비)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 대상여부(감사실) :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사항 없음

7. 규제심사(심의) 대상 여부 검토 : 해당사항 없음

8. 예산사항 : 연 3,600,000원(1명*300천원*12월)

9. 입법예고

- 기 간 : 2021. 4. 5.(월) ~ 4. 26.(월) / 21일간

10.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2.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우530-701,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 목포시청(자치행정과)]

1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3467, FAX 270-3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4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표4]

직급보조비 추가지급 구분표(제4조 관련)

지 급 대 상	수당 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목포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월 300,0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4조 (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4와 같다.</u></p>
<p><u>〈신 설〉</u></p>	<p><u>[별표4]</u></p> <p><u>직급보조비 추가지급 구분표(제4조 관련)</u></p>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입 법 예 고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5.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 감염병대응·한국판뉴딜 등 국정과제 및 주요현안 전담인력과 우리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자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총수(안 제2조) : 1,296명 → 1,348명(⊕52명)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인력 : 31명
- 감염병 대응 인력 : 3명
-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 전담 인력 : 1명
- 지역균형 뉴딜 사업 전담 인력 : 1명
-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인력 : 16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안 제4조, 별표 3)

(단위 : 명)

구 분		현 행						조 정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1,296	1,296						1,348 (⊕ 52)	1,348 (⊕ 52)			
정무직		1	1					1	1				
일반직	소계	1,275	1,275						1,327 (⊕ 52)	1,327 (⊕ 52)			
	3급	1	1					1	1				
	4급	9	5	1	1	2		9	5	1	1	2	
	5급	69	26	3	3	14	23	69	26	3	3	14	23
	6급 이하	1,196	1,196						1,248 (⊕ 52)	1,248 (⊕ 52)			
	연구직	연구사	17	17						17	17		
지도직		지도사	3	3						3	3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조표 : 별첨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 : 해당없음

7. 예산사항

구 분	증감인원	소요비용 내역 (원)			비고
		인원	1인당 보수액	총 금액	
계	52	52		2,094,196,620	
8급	6	6	44,187,320	265,123,920	3호봉
9급	46	46	39,762,450	1,829,072,700	1호봉

8. 입법예고 기간 : 2021. 4. 5. ~ 4. 26.(21일간)

9. 사전협의(승인)사항

- 행안부 지방분권과-165(2017.8.10.)호, 도 자치행정과-8004(2017.06.12.)호 : 향
후 5년간 공무원 증원 분야별 지역현안 수요
- 행안부 자치분권과-501(2017.09.11.)호, 도 자치행정과-10978(2017.08.11.)호 : 공
공부문 중심 일자리 창출 정책 이행계획
-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2805(2020.09.08.)호, 도 자치행정과-8654(2020.09.09.)호 : 지
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 조직보강 지침 및 인력 배정안 송부
-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3375(2020.10.20.)호, 도 자치행정과-10101(2020.10.22.)호 :
2021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통보

10.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4월 26일까지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우 58613, 목포시 양율로 203 목포시청(자치행정과)]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3439, FAX 270-87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1,296명”을 “1,34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273명”을 “1,32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1,348	1,348				
정무직계	1	1				
정무직	1	1				
일반직계	1,327	1,327				
3급	1	1				
4급	9	5	1	1	2	
5급	69	26	3	3	14	23
6급이하	1,248	1,248				
연구직계	17	17				
연구관						
연구사	17	17				
지도직계	3	3				
지도관						
지도사	3	3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공무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총수는 <u>1,296명</u> 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공무원의 총수) ----- ----- <u>1,348명</u> ----- -----.																																																																																																																																																																																																																			
1. 집행기관의 정원 : <u>1,273명</u>		1. ----- <u>1,325명</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table><tr><th>기관별 직급별</th><th>총 계</th><th>본 청</th><th>의회</th><th>직속 기관</th><th>사업소</th><th>동</th></tr><tr><td>총 계</td><td><u>1,296</u></td><td colspan="5"><u>1,296</u></td></tr><tr><td>정무직 계</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tr><td>시 장</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tr><td>일반직 계</td><td><u>1,275</u></td><td colspan="5"><u>1,275</u></td></tr><tr><td>3급</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tr><td>4급</td><td>9</td><td>5</td><td>1</td><td>1</td><td>2</td><td></td></tr><tr><td>5급</td><td>69</td><td>26</td><td>3</td><td>3</td><td>14</td><td>23</td></tr><tr><td>6급 이하</td><td><u>1,196</u></td><td colspan="5"><u>1,196</u></td></tr><tr><td>연구직 계</td><td>17</td><td colspan="5">17</td></tr><tr><td>연구관</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연구사</td><td>17</td><td colspan="5">17</td></tr><tr><td>지도직 계</td><td>3</td><td colspan="5">3</td></tr><tr><td>지도관</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지도사</td><td>3</td><td colspan="5">3</td></tr></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 계	<u>1,296</u>	<u>1,296</u>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u>1,275</u>	<u>1,275</u>					3급	1	1					4급	9	5	1	1	2		5급	69	26	3	3	14	23	6급 이하	<u>1,196</u>	<u>1,196</u>					연구직 계	17	17					연구관							연구사	17	17					지도직 계	3	3					지도관							지도사	3	3					<table><tr><th>기관별 직급별</th><th>총 계</th><th>본 청</th><th>의회</th><th>직속 기관</th><th>사업소</th><th>동</th></tr><tr><td>총 계</td><td><u>1,348</u></td><td colspan="5"><u>1,348</u></td></tr><tr><td>정무직 계</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tr><td>시 장</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tr><td>일반직 계</td><td><u>1,327</u></td><td colspan="5"><u>1,327</u></td></tr><tr><td>3급</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tr><td>4급</td><td>9</td><td>5</td><td>1</td><td>1</td><td>2</td><td></td></tr><tr><td>5급</td><td>69</td><td>26</td><td>3</td><td>3</td><td>14</td><td>23</td></tr><tr><td>6급 이하</td><td><u>1,248</u></td><td colspan="5"><u>1,248</u></td></tr><tr><td>연구직 계</td><td>17</td><td colspan="5">17</td></tr><tr><td>연구관</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연구사</td><td>17</td><td colspan="5">17</td></tr><tr><td>지도직 계</td><td>3</td><td colspan="5">3</td></tr><tr><td>지도관</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지도사</td><td>3</td><td colspan="5">3</td></tr></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 계	<u>1,348</u>	<u>1,348</u>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u>1,327</u>	<u>1,327</u>					3급	1	1					4급	9	5	1	1	2		5급	69	26	3	3	14	23	6급 이하	<u>1,248</u>	<u>1,248</u>					연구직 계	17	17					연구관							연구사	17	17					지도직 계	3	3					지도관							지도사	3	3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 계	<u>1,296</u>	<u>1,296</u>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u>1,275</u>	<u>1,275</u>																																																																																																																																																																																																																			
3급	1	1																																																																																																																																																																																																																			
4급	9	5	1	1	2																																																																																																																																																																																																																
5급	69	26	3	3	14	23																																																																																																																																																																																																															
6급 이하	<u>1,196</u>	<u>1,196</u>																																																																																																																																																																																																																			
연구직 계	17	17																																																																																																																																																																																																																			
연구관																																																																																																																																																																																																																					
연구사	17	17																																																																																																																																																																																																																			
지도직 계	3	3																																																																																																																																																																																																																			
지도관																																																																																																																																																																																																																					
지도사	3	3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 계	<u>1,348</u>	<u>1,348</u>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u>1,327</u>	<u>1,327</u>																																																																																																																																																																																																																			
3급	1	1																																																																																																																																																																																																																			
4급	9	5	1	1	2																																																																																																																																																																																																																
5급	69	26	3	3	14	23																																																																																																																																																																																																															
6급 이하	<u>1,248</u>	<u>1,248</u>																																																																																																																																																																																																																			
연구직 계	17	17																																																																																																																																																																																																																			
연구관																																																																																																																																																																																																																					
연구사	17	17																																																																																																																																																																																																																			
지도직 계	3	3																																																																																																																																																																																																																			
지도관																																																																																																																																																																																																																					
지도사	3	3																																																																																																																																																																																																																			

비용소요 추계서 (1)

1. 관련 법규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기 구 : 변동 없음
- 정원 및 비용 증감내역

구 분	증감인원		소요비용 내역 (원)			비고
	계	9급	인원	1인당 보수액	총 금액	
증원	46	46	46	39,762,450	1,829,072,700	1호봉

3. 비용 소요 내역

(9급 1호봉 기준)

구 분	소요비용(원)	산 출 근 거	비고
총 계	39,762,450		
○ 인건비	28,802,610		
- 기본급	19,914,000	1,659,500원*12월	
- 수당	8,888,610		
• 정액급식비	1,680,000	140,000원*12월	
• 명절휴가비	1,991,400	1,659,500원*60%*2회	
• 연가보상비	951,450	1,659,500원*86%*1/30*20일	
• 시간외수당	4,265,760	8,887원*40시간*12월	
○ 직급보조비	1,740,000	145,000원*12월	
○ 이전경비	9,219,840		
- 성과상여금	2,451,680	2,228,800원*110%	
- 연금부담금 등	5,506,09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16.688%	
- 국민건강보험금	1,131,70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3.43%	
- 장기요양보험금	130,370	(건강보험금*11.52%)	

4. 작성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김 명 준

비용소요 추계서 (2)

1. 관련 법규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기 구 : 변동 없음
- 정원 및 비용 증감내역

구 분	증감인원		소요비용 내역 (원)			비고
	계	8급	인원	1인당 보수액	총 금액	
증원	6	6	6	44,187,320	265,123,920	3호봉

3. 비용 소요 내역

(8급 3호봉 기준)

구 분	소요비용(원)	산 출 근 거	비고
총 계	44,187,320		
○ 인건비	32,042,550		
- 기본급	22,341,600	1,861,800원*12월	
- 수당	9,700,950		
• 정액급식비	1,680,000	140,000원*12월	
• 명절휴가비	2,234,160	1,861,800원*60%*2회	
• 연가보상비	1,067,430	1,861,800원*86%*1/30*20일	
• 시간외수당	4,719,360	9,832원*40시간*12월	
○ 직급보조비	1,740,000	145,000원*12월	
○ 이전경비	10,404,770		
- 성과상여금	2,883,430	2,621,300원*110%	
- 연금부담금 등	6,118,82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16.688%	
- 국민건강보험금	1,257,64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3.43%	
- 장기요양보험금	144,880	(건강보험금*11.52%)	

4. 작성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김 명 준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2,094,197	2,094,197	2,094,197	6,282,591
인 건 비		2,094,197	2,094,197	2,094,197	6,282,591
세 출		2,094,197	2,094,197	2,094,197	6,282,591
인 건 비		2,094,197	2,094,197	2,094,197	6,282,591
재원 조달		2,094,197	2,094,197	2,094,197	6,282,591
의존 재원	소 계	2,094,197	2,094,197	2,094,197	6,282,591
	보조금	-	-	-	-
	지방교부세	2,094,197	2,094,197	2,094,197	6,282,591
자체 수입	소 계	-	-	-	-
	지 방 세	-	-	-	-
	세외수입	-	-	-	-
지 방 채		-	-	-	-
기 금		-	-	-	-
특별회계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입 법 예 고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5.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지자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 조례 개선 권고안 반영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사후 관리·감독 강화 등
-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규정 개정 권고사항 반영
 -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을 개정,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최소화
 - 상위법 위반 규정 개정으로 민원인의 이의신청권 확보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세부기준 마련 [안 제5조]
- 지방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및 동의 내용 구체화 [안 제6조]

나.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수탁기관 선정기준·배점 등 사전공개 및 선정결과 공개 규정 마련 [안 제7조]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관련 조항 신설하여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안 제9조, 제10조]

○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안 제13조]

다.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

○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 [안 제25조]

○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등 반영 및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안 제6조 및 제16조]

○ 수탁자의 주요 계약사항 위반, 위탁사업 관련 중대 위법행위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확히 규정 [안 제17조]

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관리·운영사항 구체화

○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의무사항 규정 [안 제14조]

○ 인계·인수, 운영지원 및 사용료 징수 사항 규정 [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마.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 의무 규정 삭제 [정비대상 : 제10조]

바.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 삭제 [정비대상 :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 : 해당없음

6. 예산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기간 : 2021. 4. 5. ~ 2021. 4. 26.(21일간)

8. 사전 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9.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4월 26일까지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우 58613, 목포시 양율로 203 목포시청(자치행정과)]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3439, FAX 270-87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산하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도 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시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시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 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책임능력 및 공신력
5. 사업계획의 타당성
6. 그 밖에 시장이 위탁운영의 효율성·투명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목포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 결정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포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 사무의 부서에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계 공무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 목포시의회 의원
 - 2.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사업결과보고서 등의 심사 및 현장확인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 ④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에게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5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범위 및 내용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위탁운영에 필요한 보조 또는 지원경비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7. 이용자·종사자 등과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
8. 지도·점검, 감사,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9. 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사항
10.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종전 조례에 따라 계약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와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협약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재계약) ① 시장은 위탁사무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제24조에 따른 처리상황의 감사 결과, 제2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 비위사실 등이 야기된 경우
4. 제23조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의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시장은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9조(인계·인수) ① 위탁사무 소관부서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 기구, 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위탁사무 소관부서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제17조에 따른 위탁계약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 기구, 물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20조(운영지원) 시장은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용자 등이 납부하는 이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 및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해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해 시정요구 등을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문책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 제104조(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력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

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